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15 - 23 - 119~137호

안 건 명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피 심 인
- ① (주)씨제이헬로비전(양천방송, 경남방송, 해운대기장방송, 영동방송, 신라방송)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13층(목동)
대표이사 김진석
  - ② (주)씨제이헬로비전 아라방송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길 31(조례동)
대표이사 김영홍
  - ③ (주)티브로드 한빛방송(남동방송, 수원방송, 중부방송, 전주방송, 낙동방송)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고잔동)
대표이사 김형준
  - ④ (주)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81길 21(수유동)
대표이사 김형준
  - ⑤ (주)씨앤엠(경동케이블티브이, 구로케이블티브이, 경기케이블티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길 9(삼성동)
대표이사 장영보

- ⑥ (주)씨앤엠 강남케이블티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18(논현동)
대표이사 성낙섭
- ⑦ (주)현대에이치씨엔 금호방송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8길 108(산격동)
대표이사 심재성
- ⑧ (주)현대에이치씨엔 충북방송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83(지북동)
대표이사 류성택
- ⑨ (주)씨엠비 대전방송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84번길 20(선화동)
대표이사 김태율

의결연월일 2015. 5. 28.

주 문

1. 피심인들은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오인광고, 객관적 실증 불가능 광고, 중요조건 누락 광고 등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각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결합상품 광고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요내용의 기준과, 부당하게 허위·과장 광고하여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유통망 관리 방안 등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각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대리점 및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등에 팝업 창으로 2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들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각 부과한다.

가. 피심인①,③ : 각 과징금 37,500,000원

나. 피심인⑤ : 과징금 22,500,000원

다. 피심인②,④,⑥,⑨ : 각 과징금 7,500,000원

라. 피심인⑦,⑧ : 각 과징금 3,750,000원

마.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바.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일반현황

피심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초고속인터넷·CATV·VOIP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14년 12월말 기준, 서비스별 신규 가입자 수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사업자 서비스별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단위: 천명, 백만원) >

사업자	구 분	인터넷	CATV	VOIP
CJ계열	가입자 수	236	1,267	206
	매 출 액	36,894	220,422	11,159
티브로드계열	가입자 수	311	1,219	141
	매 출 액	50,905	233,123	11,097
씨앤엠계열	가입자 수	245	955	116
	매 출 액	30,682	78,171	6,163
CMB계열	가입자 수	38	365	2
	매 출 액	2,515	18,265	164
현대HCN계열	가입자 수	65	401	41
	매 출 액	10,000	36,309	2,581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o 2015. 1. 27~3. 20, SO 20개사(법인 10개사)

구 분	조 사 대 상	
CATV사업자	CJ계열(CJ헬로비전 소속 양천방송·경남방송·해운대기장방송·영동방송·신라방송 및 독립법인인 CJ아라방송)	20 (법인 10)
	티브로드 계열(티브로드 한빛방송 소속 남동방송·수원방송·중부방송·전주방송·낙동방송 및 독립법인인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씨앤엠 계열(씨앤엠 소속 경동케이블티브이·구로케이블티브이·경기케이블티브이 및 독립법인인 씨앤엠 강남케이블티브이)	
	현대 HCN 계열(각 독립법인인 충북방송 및 금호방송)	
	CMB 계열(각 독립법인인 대전방송 및 광주방송)	

2. 행위사실

2015. 1.부터 2015. 3.까지 주요 CATV사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온라인 사이트, 지역 정보지 및 지역별 대리점(판매점 포함)·협력업체 전단지 등을 통해 광고한 광고물 총 180건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심인①은 총 조사건수 56건 중 42건에 대하여, 피심인②는 총 조사건수 6건 중 5건에 대하여, 피심인④는 총 조사건수 4건 중 3건에 대하여, 피심인⑤는 총 조사건수 13건 중 12건에 대하여,

피심인⑥은 총 조사건수 5건 중 5건에 대하여, 피심인⑦은 총 조사건수 11건 중 5건에 대하여, 피심인⑧은 총 조사건수 11건 중 3건에 대하여, 피심인⑨는 총 조사건수 14건 중 12건에 대하여,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광고, 중요정보 누락광고의 유형으로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 가입을 유도하였고,

피심인③은 총 조사건수 60건 중 55건에 대하여, 오인광고,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광고, 중요정보 누락광고의 유형으로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 가입을 유도하였다.

오인광고란 기간·다량·결합 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하여 광고함으로써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실제로는 결합의 혜택이 아님에도 결합할인으로 광고하는 것 등이 있고, 실제 지급금액이 아닌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 또는 실제로는 요금할인과 일부 경품 혜택을 부여하는데도, 요금할인액과 경품금액을 합한 총금액에 상응하는 경품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것도 포함된다.

실증불가능 광고란 “업계 최대 경품(현금) 지급”, “대한민국 최저 가격”, “기존 통신사 위약금 100% 지원” 등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내용 내지 실제와 다른 내용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것이다.

중요정보 누락광고란 요금할인, 경품지급 등의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표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혜택은 약정기간, 요금제, 결합상품 수, 제휴카드 사용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거나 제한적 상황 하에서만 제공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건이나 상황을 설명·안내하는 것을 누락시키거나, 기본적인 위약금 부과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다.

< 광고물 조사결과(단위: 건) >

구 분	조사대상	위반건수	위반유형		
			오인광고	실증불가능	중요 정보 누락
피심인①	56	42	-	32	26
피심인②	6	5	-	4	2
피심인③	60	55	5	34	41
피심인④	4	3	-	3	-
피심인⑤	13	12	-	7	12
피심인⑥	5	5	-	2	5
피심인⑦	11	5	-	5	4
피심인⑧	11	3	-	3	4
피심인⑨	14	12	-	7	9
총계	180	142	5	97	103

※ 광고물에 포함된 오인광고, 객관적 실증불가 광고, 중요 정보 누락광고 위반 유형 건수는 중복될 수 있으므로 그 합계가 위반 건수와 차이가 있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별표 4]제5호바목 및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

기준」 제3조제1항제1호나목은 “결합상품의 구성이나 할인율, 위약금, 할인규모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부당하게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 관련 법령 >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별표 4]제5호바목 :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판매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경우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 편의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轉移)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제3조제1항제1호나목 : 결합상품의 구성이나 할인율, 위약금, 할인규모 등 결합상품의 주요내용에 대해 부당하게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2. 위법성 판단

피심인들의 행위는 방송통신 결합상품과 관련하여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광고, 중요조건을 누락한 광고 등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하여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별표 4]제5호바목 및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제3조제1항제1호나목의 “결합상품의 주요내용에 대해 부당하게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IV. 시정조치 명령

1.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①내지⑨는 결합상품에 대해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오인 광고, 객관적 실증 불가능 광고, 중요조건을 누락하는 광고 등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 하여야 한다.

2. 업무처리절차 개선

피심인①내지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따라 결합 상품 광고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요내용의 기준과, 부당하게 허위·과장 광고하여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유통망 관리 방안 등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 절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①내지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대리점 및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등에 팝업 창으로 2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①내지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V. 과징금 부과

피심인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53조(과징금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기준 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6]에 따라 피심인들의 금지행위 위반행위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 상한액, 기준금액, 최종과징금 산정은 다음과 같다.

가. 과징금 부과 상한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6]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매출액 증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많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정한다.

나. 기준 과징금

피심인①내지⑥,⑨의 위반행위는 위반율이 높지만 전국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업규모가 작으므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 과징금은 7천5백만원(피심인①,③), 4천5백만원(피심인⑤), 1천5백만원(피심인②,④,⑥,⑨)이다.

피심인⑦,⑧의 위반행위는 위반율이 낮고 전국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사업규모가 작으므로 '중대성이 약한 행위'에 해당하며, 기준 과징금은 7백5십만원이다.

2. 필수적 가중

피심인①내지⑨는 동일한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없으므로 필수적 가중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추가적 가중 또는 감경

피심인①내지⑨는 조사에 협조하고,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 금액의 50%를 감경한다.

4.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①,③이 각 37,500,000원, 피심인⑤는 22,500,000원, 피심인②, ④,⑥,⑨는 각 7,500,000원, 피심인⑦,⑧이 각 3,750,000원이다.

VI.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들은 위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VII. 결론

상기 피심인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53조(과징금의 부과)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성 준 (인)

부위원장 허 원 제 (인)

위 원 김 재 홍 (인)

위 원 이 기 주 (인)

위 원 고 삼 석 (인)